목포항만청, 특정단체에 공유수면 사용 특혜 논란

〈목포해양대·수상레저안전협회〉

12노트 이하 운항 가능 공유수면에 '15노트 이상' 보트면허시험장 승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목포항 내 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장 개설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목포해양대는 같은 대학 출신이 지부장으로 있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을 위해 자신들의 사업 구역까지 제공하는가 하면, 목포항 내에서의 사업 허가 신청까지 대신해 준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현행 법규상 12노트(kn·시속 22.2km) 이하 속도로 운항해야 하는 목포항 내 공유수면에서 15노트 이상속도로 운항할 것을 요구받는 보트 조종시험 및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목포해양대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목포해양항만청 스스로 '목포항 내 운항 선박 속력을 12노트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목포항 항만시설 운영세칙'(항만청 고시)'을 어기면서까지 해당 기관의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이를테면 30㎞이하 속도로 달려야 하는 구간에서 60㎞이상 달려야 하는 면허시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허가했다는 얘기다.

목포해양대와 수상레저안전협회는 보트 등 조종면허시험 중 실기시험 및 교육을 수행하면서 수상안전레저법 시행규칙(4조 1항)에 따라 응시자를 대상으로 '15노트 이하 또는 25노트 이상으로 운항한 경우' 지정속력 유지 불량 항목을 들어 감점 처리하고 있다. 지정속도 30㎞ 이하 구간에서 40㎞이상으로 달려야 면허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장을 운영하는 셈이다.

목포해양대가 지난 2010년부터 해당 해역 내 '요트면허 시험 및 교육 사업용 계류장'(1278.8㎡) 사업 승인을 받아 수상레저기구 시험장을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목포해양항만청이 수년간 불법 사업권을 내줬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목포해양항만청은 더 나아가 지난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을 대행하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조차 해당 해역 사용을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며 출범시킨 단체다. 초대 협회장에는 해경 치안감 출신 인사가 임명됐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두 기관의 항만청 고시 위반이 맞다"면서 "정부의 해양 레저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해당 시험장과 면제 교육장이 운영됐다"면서 사실상 불법 운영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민간업체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는 이같은 점 등을 들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유·사용의 타인 공동사용 승인 취소' 소송을 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특혜 논란에 '관피아' 있다

수상레저안전협회 지부장 등 목포해양대 출신 대거 포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특혜 의혹에는 '해양수산부'와 '목포 해양대 출신' 전·현직 간부가 끼어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유행한' '관피아(관료 마피아)' 가 연상되고 있다.

2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목포해양대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을 위한 공유수면 공동 점·사용 승인을 항만청에 수상레저안전협회 대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목포해양대학교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으며 안전협회 사무실도 목포해양대학교 내 위치해 있다.

목포해양대가 왜 2010년부터 혼자서 독점해온 목포항 내 해역을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함께 쓰겠다며 흔쾌히 '공동 사용 승인'을 요청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관계자는 "관련법상 공유수면은 공동사용이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목적에만 엄격히 제한돼 있는 만큼 수상레저면허목적도 이에 해당하는 지 행정소송을 걸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목포해양항만청의 '특혜'와 목포해양대의 사업 구역까지 제공하고 공동 사업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친절함이 더해지면서 민·관 '유착'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목포항만청은 불법임에도,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조종면허시험장 사용 승인을 해줬고 목포해양대는 해당 해역 내에서의 불법 사업을 함께 하는 '편의'를 제공한 셈이다.

지난 2011년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출범 당시부터 해경 퇴직 간부나 해양대학교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데다 1999년 설립된 민간 중심의 이룬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와 성격이 비슷해 논란이 일었다.

법정단체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해경 퇴직간부와 해양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상 레저 민간 단체의 이권을 빼앗는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법정단체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연합회)를 통합하려 했지만 연합회 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해양 레저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단체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출범 때부터 시험장 개설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민간 업자들의 반발이 심했고, 일부는 시험장(교육장) 개설이 안돼 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며 "요트 한 번 타보지 않은 해경 퇴직 간부나 해양대 출신 인사들이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애먼 민간 업자들 숨통을 조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시험 면제 교육으로 지난 2013년도에만 6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국고 보조금도 6억8000만원 받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교실

광주 북구 두암보건지소는 지난 27일 어린이들에게 비만예방과 올바른 식생활을 심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교실'을 열었다.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영양사와 함께 식품구성판을 이용해 영양음식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세월호 수색 인력·장비 대폭 축소 논란

합동구조팀 내부 방안

내달 15일 잠수사 절반↓

독도함 등 진해 복귀 예정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다음달부터는 세월호 수색 잠수사와 해군함정 등 인력과 장비를 대폭 축소해 운영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오는 30일 실종자 가족들에게 1차 정밀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수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내부방침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내부문서에 따르면 해경·해군 관계자 등이 지난 21일 수중탐색 협조회의에서 오는 7월 15일까지를 목표로 수중탐색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연장 여부는 유가족 반응과 탐색결과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수색에 지친 해군 잠수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투입 잠수사 수를 7월 1일부터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15일 이후에는 현재 기준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는 내부 방안이 제시됐다. 이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일부터 해군 SSU 잠수사가 현재 109명에서 70여 명으로, UDT잠수사가 현재 89명에서 60여명으로 총 198명에서 130여명으로 줄어든다. 7월 15일부터는 현재의 절반 가량인 100여명의 잠수사가 현장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계획에는 또 물살이 거센 대조기, 중조기에는 잠수사들을 전원 철수시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대조기, 중조기에도 조류의 흐름을 지켜보며 현장 바지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함정 등 장비지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독도함은 정비와 훈련 참가를 이유로 다음달 15일께에는 진도 해역을 떠나 진해 지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또 실종자 감소로 현장구조지휘본부 역할이 감소했다며 지휘본부 인원도 현재 28명에서 18명으로 줄여 해군 3함대 사령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당초 합동구조팀은 1차 정밀수색이 끝나는 이달 30일 이후에는 해군, 해경, 민간이 각각 맡았던 수색 구역을 교대해 다시 정밀수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에 대해 "당초 해군측에서 상기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민·관·군 합동수색팀은 마지막 한 사람의 실종자까지 끝까지 수색해 나갈 것이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범대본과 해경 해군간 수중탐색 협조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유가족 의견, 국민 정서를 고려 7월 15일까지 목표를 두고 연장하고, 유가족 반응과 탐색결과를 고려해 추가연장한다"는 단계적 연장 방안이 적혀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살한 진도 경찰 '순직 처리' 검토

"'세월호' 업무 스트레스 호소" 주변 진술 감안

진도경찰이 지난 26일 발생한 현직 경찰관 투신 자살사건과 관련, 해당 직원을 순직처리키로 했다.

29일 진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9시30분께 진도군 진도대교에서 진도경찰서 김모(49) 경위가 투신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진도 경찰은 김 경위가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현장을 오가며 유가족들을 돕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들의 진도 방문 시 유가족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는 주변 진술을 감안,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경위가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72일 동안에 세 번밖에 집에 다녀오지 못했다'며 괴로움을 토로한 것을 들었다"는 동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신 장소 주변을 수색, 김 경위 시신 수습에 나서는 한편, 김 경위가 최근 승진심사에서 탈락해 고민해왔다는 주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순직 여부 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

'카드 도박' 돈 잃은 50대 홧김 자수 … 처벌 받을까 횡설수설

쌍나팔

○…카드 도박으로 돈을 잃은 50대 남성이 홧김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도박 사실을 실토한 바람에 함께 도박판을 벌인 남성 2명이 줄줄이 경찰 서행.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50)씨는 전날 오후 서구 화정 지구대를 찾아가 지인 문모(50)씨 등 2명과 함께 27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날이 새도록 쌍촌동의 한 사무실에서 카드 도박을 벌인 사실이 있다고 직접 신고했다는 것.

○…제발로 경찰에 찾아간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걸었던 것은 맞지만 정확한 판돈은 모르겠다", "내가 잃은 돈도 얼마 인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는데, 이를 지켜본 경찰은 "도박 빚을 갚기 싫어 신고를 했는데 처벌 받게 될까봐 진술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2133	1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23, 104동 6층 602호 [시전동,우미타운] 59.99㎡	아파트	104,000,000 104,000,000	
2014타경 3068	1	광양시 광장로 112-20, 101동 4층 405호 [중동,성호아파트] 59.94㎡	아파트	68,000,000 68,000,000	
	2	광양시 광장로 112-20, 103동 10층 1009호 [중동,성호아파트] 59.94㎡	아파트	68,000,000 68,000,000	
	3	광양시 광장로 112-20, 106동 7층 709호 [중동,성호아파트] 59.94㎡	아파트	68,000,000 68,000,000	
	4	광양시 광장로 112-20, 104동 2층 204호 [중동,성호아파트] 49.95㎡	아파트	52,500,000 52,500,000	
2014타경 3341	1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298, 103동 4층 403호 [송촌파인힐아파트] 84.82㎡	아파트	162,000,000 162,000,000	
2014타경 3396	1	순천시 서면 배들이길 17, 109동 1층 104호 [선평배들마을주공아파트] 59.83㎡	아파트	93,000,000 93,000,000	
2014타경 3785	1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56-7, 5층 502호 [나로연립주택] 26.1618㎡	아파트	78,000,000 78,000,000	
	2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56-7, 5층 510호 [나로연립주택] 55.2802㎡	아파트	152,000,000 152,000,000	
2014타경 4313	1	순천시 봉화2길 128, 204동 15층 1503호 [조례동,대림2차아파트] 84.875㎡	아파트	126,000,000 126,000,000	2014타경5798[중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4타경 3280	1	여수시 관문동 704-1 63㎡ 여수시 동문로74-7 45.77㎡ 7.28㎡ 부속건물 변소1.87㎡ 제시외 주택 18.7㎡	대 단독주택	40,275,500 40,275,5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현황상 멸실건축물대장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10106	1	여수시 봉산동925 4569㎡[현황일부건부지,공유자양명선지분3/45,강은주,강우종,강우근각지분2/45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54,828,000 54,828,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2013타경6336[중복]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3타경 14641	1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57-10 1196㎡	답	12,318,800 12,318,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2188	1	순천시 해룡면 도롱리 263-1 714㎡[갑구순위번호1번공유자신필호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대	8,739,360 8,739,360	매각제외타인소유건물소재
2014타경 2201	1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030-2 1653㎡[분묘소재토지위의수목[편백나무등]매각제외]	전	34,713,000 34,71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전및묘지
2014타경 2515	1	고흥군 포두면 상포리 679-7 641㎡	답	6,025,400 6,025,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3150	1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414 2364㎡[수목[산수유묘목]은매각제외]	답	118,200,000 118,2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3457	1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산178 8331㎡	임야	4,332,120 4,332,120	
	2	동소 산172-1 29435㎡[공유자전일지분전부]	임야	12,158,250 12,158,25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4타경 3501	1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131 817㎡[갑구순위1번공유자김재권지분전부]	답	2,755,713 2,755,713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목록1,3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31-1 16㎡[목록1과지분동일]	도로		
		동소 133 975㎡[목록1과지분동일]	답		
2014타경 3563	1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380-2 79㎡	답	2,054,000 2,05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도로
	2	동소 387 916㎡[공유자연윤옥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답	20,336,000 20,3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4177	1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909-1 663㎡	대	52,377,000 52,377,000	매각대상토지에타인소유건물소재
[기타]					
2014타경 2843	1	여수시 화치동 공장단지국민임대산업단지01101블럭0005노트 675.78㎡ 식품가공공장10.4㎡ 휴게실139.86㎡ 창고72㎡ 제시외 창고 등 231.58㎡및기계기구 38식[제시외건물및공장기계기구목록포함[일부소재불명]]	공장	723,267,360 723,267,360	토지상타인소유컨테이너건물소재유치권신고다수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4. 7. 14.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7. 21.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김동진